08-07 (통권 285호)
2008.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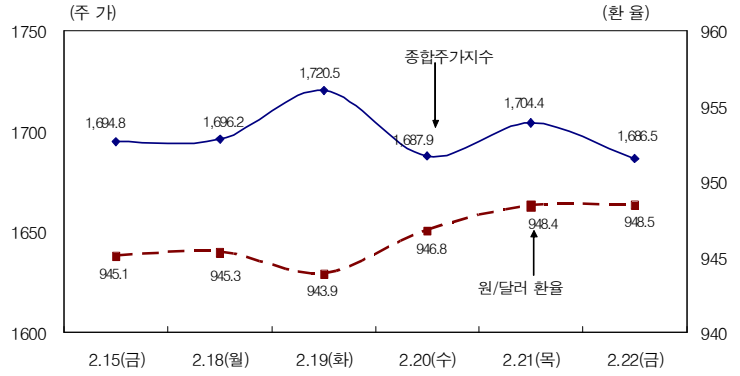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5~2.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1

월간 경제 동향 16

□ 실물 부문 : 신규 취업자수 급감 16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의 약세 지속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남 충 현 연 구 원 (3669-4142, netch30@hri.co.kr)

Executive Summary

□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1. 경제 성장의 고용창출력 하락 추세 분석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었다. 연평균 일자리 창출 개수는 1993~97년의 49만 5천개에서 2002~07년에는 약 31만개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경제성장률 1%당 증가한 일자리 수는, 1993~97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약 6만3,000개(전체 취업자수의 약 0.32%)였으나, 2002~07년의 기간 동안에는 약 5만 9,000개로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업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고용창출이 급감하였다. 제조업은 1993~97년 연평균 4만 4,000명, 2002~07년 연평균 2만 5,000명의 고용 감소를 보였으며, 서비스업은 고용증가폭이 1993~97년의 연평균 62만 4,000명에서 2002~07년의 40만 5,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직종별로 보면, 중간 직종의 고용창출이 가장 크게 저하되었다.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으로 인하여 상위 직종인 '전문가'의 고용은 2001~07년의 기간에 44만 3,000명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면 하위 직종인 '단순노무 종사자'역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3만 명의 매우 큰 폭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간 직종에 해당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기간 7만 7,000명이 감소하였다.

2.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

이러한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첫째, 성장잠재력의 고갈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이 부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고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1~97년에 연평균 6.6%였던 것에서 1998년~2006년에는 4.5%로 하락하였다.

둘째, 경제 주력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아직 국내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계수는 10억 원당 95년에 8.5명에서 2003년에 4.2명으로 낮아졌다. 특히 서비스 부문과 제조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IT산업의 취업계수도 10억 원 당 1995년의 13.8명에서 2003년에 3.8명으로 크게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셋째, 노동절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들 수 있다.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의 확대에 기인하여,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1995년의 15.9명에서, 2000년의 11.8명, 2003년의 10.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발견되는 추세인데,

제조업은 1995년의 8.5명에서, 2000년의 5.1명, 2003년의 4.2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1995년의 23.0명에서, 2000년의 16.4명, 2003년의 15.2명으로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수출 산업의 높은 수입유발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의 고용창출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의 수입유발 효과가 높아 내수 경기 진작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전산업의 수입 계수는 2000년 기준 14.7(2003년 기준 13.4)로 일본의 5.3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특히 많은 IT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수입의존도는 2003년 기준 31.8%에 달하고 있어, IT 산업의 호조가 내수로 파급되는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

다섯째, 반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내수 부문의 침체가 장기화하였다. 소비 및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995년 30.4, 19.4에서 2006년 19.2, 13.9로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실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2003~06년의 기간 동안 수출은 연평균 14.0% 증가한 반면, 동기간 소비는 연평균 2.1%, 투자는 연평균 2.9%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3. 고용창출력 저하의 문제점

고용창출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매력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고용창출력의 저하로 가계의 근로 소득 확충이 부진했으며, 이는 구매력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92~96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7.9%에 달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3.8% 특히 2003년 이후 2.7%)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바로 가계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실질 가계지출 증가율 역시 동기간 8.0%에서 3.8%로 급락하였다.

둘째, 불안정 고용 증가의 한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및 단기간 근로자 비중이 증대하는 등 불안정 고용 상태의 인구가 증가하여, 질적인 고용 수준은 더욱 악화되었다. 1990~96년의 기간 동안에는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평균 43.0%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1~07년의 기간에는 그 비율이 48.8%로 상승하였다. 또한 주당 36시간 미만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여, 동 비율은 1990~96년에 평균 6.5%였던 것에서 2001~07년의 기간에는 평균 11.4%로 증가하였다.

셋째, 중간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양극화를 유발한다. 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에 비하여 중간 일자리의 고용창출이 부진하여 일자리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D. Acemoglu(1998), 전병유(2007) 등의 방법을 참조하여 전체 일자리를 직종 및 산업별

로 20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1~5분위로 구분하였다.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5분위(상위 20%)와 1분위(하위 20%)의 일자리는 각각 70만 2,000개, 62만 2,000개 증가하였다. 반면, 동기간 중간 일자리에 해당하는 3분위의 일자리는 22만 7천개의 증가에 그쳤으며, 2분위, 4분위도 각각 25만 3,000개, 38만 3,000개의 증가에 머물렀다.

넷째, 이러한 양극화는 소득 계층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창출력 저하와 함께 중간일자리가 감소하고 불안정고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면서 가계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나 1분위 계층(하위 20%)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으며, 그 결과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20% 의 평균근로소득/ 하위20% 의 평균근로소득)은 2001년의 4.81배에서 2006년에는 5.12배로 벌어졌다.

4.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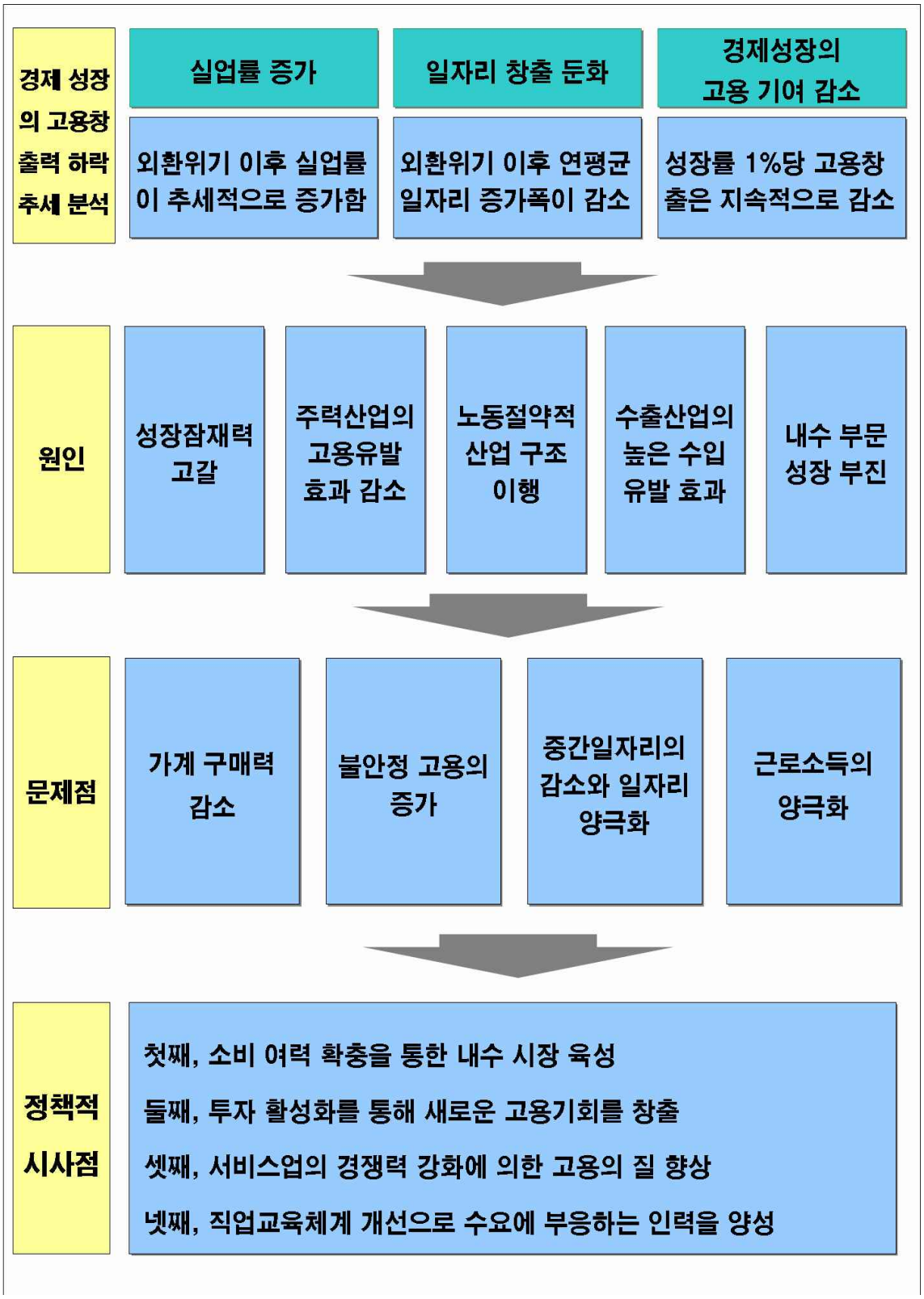
첫째, 소비 여력 확충을 통한 내수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내수 산업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충분한 튼튼한 내수 시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및, 주거비와 각종 준조세 등 경직적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둘째,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국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완화 및 세제정비를 통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을 해소하는 등 사회의 글로벌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셋째, 서비스부문의 고부가가치화로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업에서 미숙련 직종의 비중이 높은 등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하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금융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부문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통한 지식노동자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넷째,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직업 교육의 내용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 추세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탈공업화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생산직 기술자 양성위주의 직업교육체계를 탈피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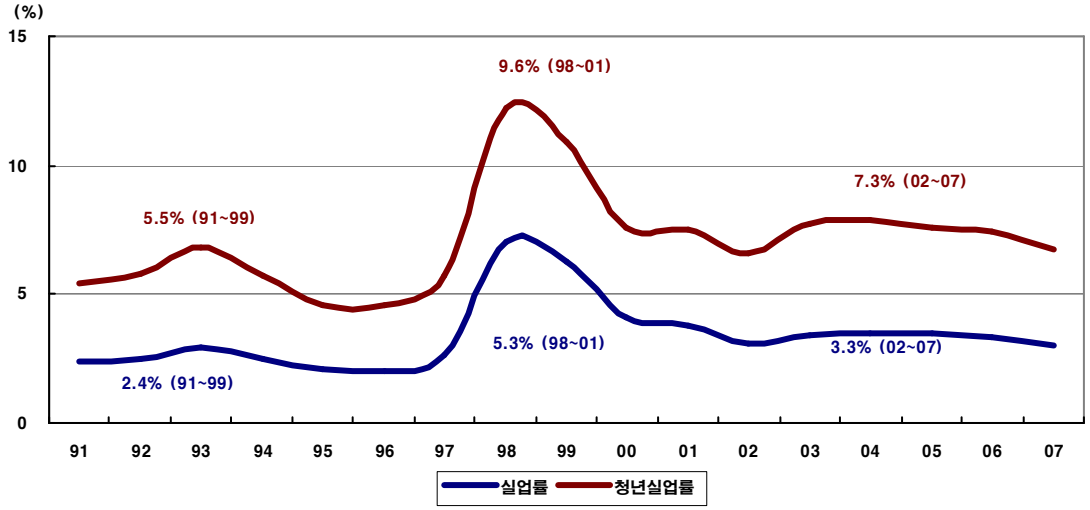


1. 경제 성장의 고용창출력 하락 추세 분석

○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관찰됨

-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9년에 연평균 2.4%에서, 이후인 2002~07년에는 3.3%로 0.9%p가 높아짐
  - 특히 15~29세 연령층의 청년실업률의 경우 같은 기간 5.5%에서 7.3%로 1.8%p나 증가함

<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구직 기간 1주 기준임.

- 경제 규모와 인구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제의 고용탄성치 (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는 70년대(1972~79년) 평균 0.51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0.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0.26으로 추가 하락함
  -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취업자수는 1991~97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약 6만 3천명에서 2002~07년에 약 5만 9천명으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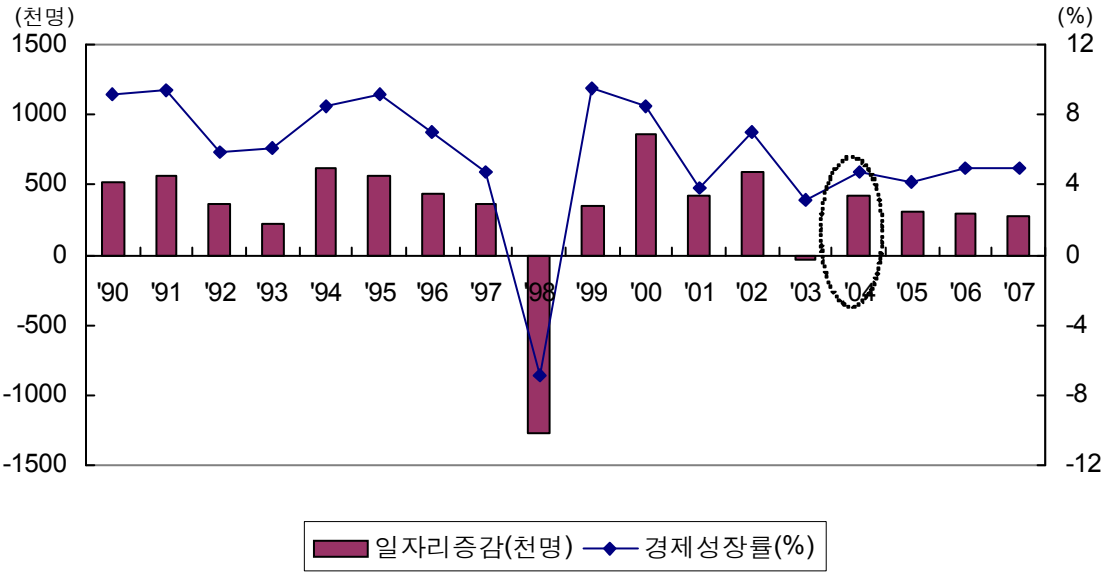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추이 >

	1972 ~79	1981 ~90	1991 ~97	1999 ~01	2002 ~07
고용탄성치[A] (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	0.51	0.34	0.32	0.40	0.26
기간중 평균 취업자수[B] (만 명)	1,208.4	1,566.8	1,988.9	2,100.6	2,271.8
경제성장률 1%당 창출 취업자 (B×A/100, 만 명)	6.11	5.30	6.29	8.44	5.8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취업자수는 구직 기간 1주 기준
2)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980년과 1998년은 제외.

- 특히 2003년에는 GDP는 3.1%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고용없는 성장"[1]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취업자수가 연평균 31만 명이 증가하였지만, 2003년에는 3만 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음

< 경제성장률 및 일자리 증감 추이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국민계정, 한국은행.

1) 고용 없는 성장이란 좁은 의미에서 경기순환상의 경기회복 국면에 8분기(24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이라고 정의되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일자리 성장 현상, 그리고 두 현상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확대 강화되는 고용불안정성 현상을 의미함.

○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 부진

- 전산업에 걸친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율)는 외환위기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0보다 크지만, 제조업 부문에서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고용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남
  - 전산업에서의 고용탄성치는 외환위기 전후인 93~97년 기간과 2002~07년 기간에 0.31에서 0.26으로 감소하였고, 연평균 취업자 증가는 49만5천명에서 31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제조업 부문의 고용탄성치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었음
  -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고용탄성치가 93~97년 기간중 연평균 0.72에서 2002~07년에는 0.50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2~2007년의 기간에는 고용인원이 연평균 2만5천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탄성치도 마이너스값(-0.16)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 및 고용증감 추이 >

	'93~'97		'02 ~ '07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고용탄성치	고용증감(천명)
전산업	0.31	495.0	0.26	310.2
제조업	-0.35	-43.8	-0.13	-24.7
서비스업	0.72	623.8	0.50	405.0
건설	0.50	80.3	0.52	44.2
도소매 · 음식숙박업	0.82	246.8	-0.16	-24.7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0.77	222.3	1.14	343.3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	0.58	71.5	0.34	37.5

자료: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국민계정, 한국은행.

○ 상·하위 직종의 고용 증대 및 중간 직종의 고용 감소

- 직종별로 보면, 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고용이 각각 2001~2007년의 기간 동안에 44만 3천명, 38만 6천명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평균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고용도 동기간 53만명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의 고용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51만5천명 증가)에서 이루어졌음
  - 서비스업 부문에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단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평균임금이 중간 정도 수준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2001~2007년의 기간 동안 고용이 7만7천명이 감소하였음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감소는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동기간 24만 7천명 감소)

< 직종별 평균임금 및 고용증감 추이 >

(단위: 만원, 천명)

	2001년		2007년		취업자수 증가(천명)		
	평균임금	취업자수	평균임금	취업자수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83.3	222	405.7	293	70	44	25
전문가	188.2	1,266	253.9	1,709	443	37	407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5.2	1,528	218.1	1,913	386	52	337
사무 종사자	138.0	2,473	192.8	3,080	607	120	48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6.7	1,674	172.8	1,788	113	56	5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4.4	1,859	157.7	1,782	-77	-247	171
판매 종사자	92.4	1,096	131.5	1,113	18	-1	18
서비스 종사자	91.5	1,445	114.2	1,528	83	-5	8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5.4	62	103.9	79	17	—	—
단순노무 종사자	72.6	1,916	93.6	2,446	530	15	515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07년, 01년, 통계청.

2.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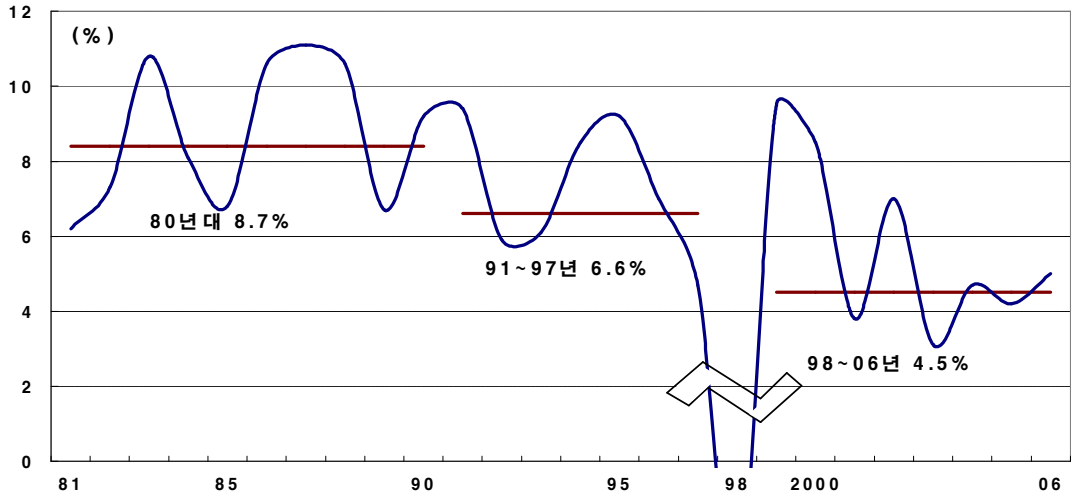
1) 성장잠재력의 고갈

○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한 저성장이 고용창출을 저해하였음

-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인하여 산출량당 고용인원이 감소할 때, 고용 증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만회할 만큼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 외환위기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됨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연평균 6.6%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에는 4.5%로 하락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정

2) 기간중 연평균임.

-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급락은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존재하던 투자 여력도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인 자본축적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 국내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9.6%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의 기간 동안에는 4.7%로 급락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13.4%에서 9.9%로 하락함
·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26.3억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5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2006년 109.3억 달러)

<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관련 지표 추이 >

	1980년대	1991~97년	1998~2006년
실질설비투자 증가율 (%)	8.5	9.6	4.7
명목설비투자/명목GDP (%)	13.1	13.4	9.9
해외투자 (억 달러)	3.2	26.3	56.0
해외투자/명목설비투자 (%)	1.5	4.3	9.8

자료 :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주 : 기간중 연평균임.

2) 경제 주력 산업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지고 있어,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2003년 전산업 중 IT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산출액 비중은 11.5%에 달하였음

- 반면,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하락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2003년 IT산업의 취업계수는 3.8명으로, 95년 13.8명, 2000년의 5.6명에 비하여 급감하였음
  · 취업계수란 10억원의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로, 고용유발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 IT 산업의 취업계수 및 산출액 비중 추이 >

	1995년	2000년	2003년
IT 산업의 취업계수(명, 10억원)	13.8	5.6	3.8
전산업 대비 IT산업 산출액 비중(%)	8.5	12.3	11.5

자료 : 산업연관분석, 한국은행.

3) 노동절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이행

○ IT 기술 등에 따른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인해 전산업에 걸쳐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고용유발력은 저하됨

-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기술진보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산업에 걸쳐 취업계수가 감소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의하면,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1995년의 15.9(명/10억 원)에서 2000년에는 11.8, 2003년에는 10.4로 감소하였음
  -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1995년 8.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0년 5.1, 2003년에는 4.2를 기록함
  -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계수가 제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년의 23.0에서 2000년에는 16.4, 2003년에는 15.2로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

(단위: 명/10억원)

	1995년	2000년	2003년
전산업	15.9	11.8	10.4
제조업	8.5	5.1	4.2
서비스업	23.0	16.4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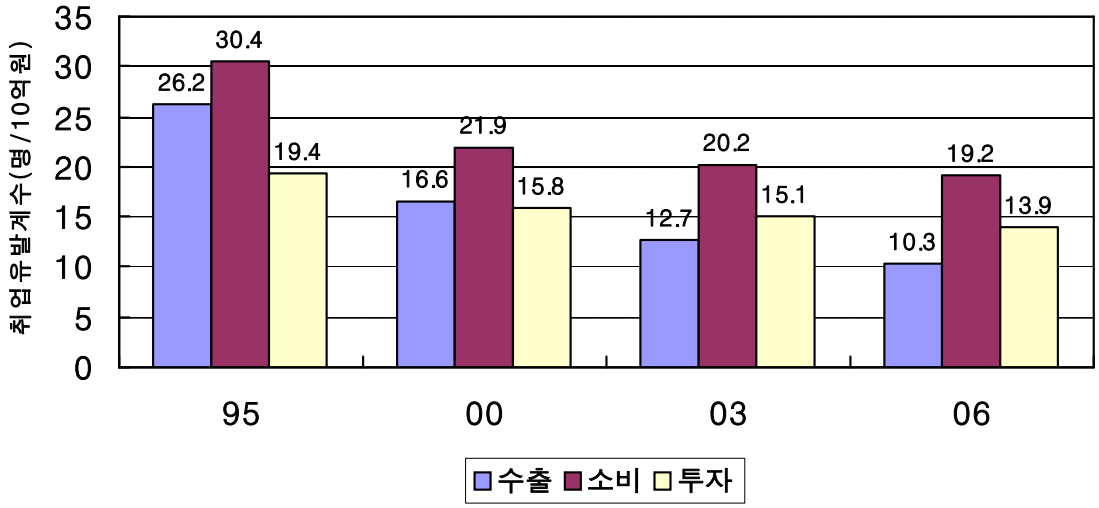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관분석, 한국은행.

4) 수출산업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감소

○ 수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약화되어 고용창출력의 저하를 초래함

- IT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상품 수출비중이 증가 등으로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는 1995년 26.2에서 2003년 12.7, 2006년에는 10.3으로 급격하게 하락함
  - 소비 및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995년 30.4, 19.4에서 2006년 19.2, 13.9로 하락하였으나 수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계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6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추정 및 시사점", 2007. 재인용.

- 수출의 취업유발 계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자본집약적이고,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 IT산업의 수출 비중이 증대하였고, 그 결과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5년의 0.698에서, 2000년의 0.633, 2003년의 0.647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00년 기준 0.892였다는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수출 비중은 95년 24.3%에서 2003년 14.1%로 감소한 반면, 자본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의 수출 비중은 동 기간 69.6%에서 79.8%로 증가하였고, IT 산업의 경우 20.4%에서 28.0%로 증가함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추이 및 부문별 구성비 >

		1995	2000	2003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698	0.633	0.647
부문별 수출 비중 (%)	경공업	24.3	17.6	14.1
	중화학공업	69.6	74.1	79.8
	전기전자	28.0	36.0	35.2
	IT(정보통신, 반도체)	20.4	28.7	28.0

자료: 관세청. 산업연관분석, 한국은행.

5) 내수 부문 침체의 장기화

○ 상대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내수 부문의 성장세가 부진하였음

- 내수 부문은 수출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더 크지만 수출 부문에 비하여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됨
  · 03~06년의 기간 동안 수출은 연평균 14.0% 증가한 반면 소비는 2.1%, 투자는 2.9% 증가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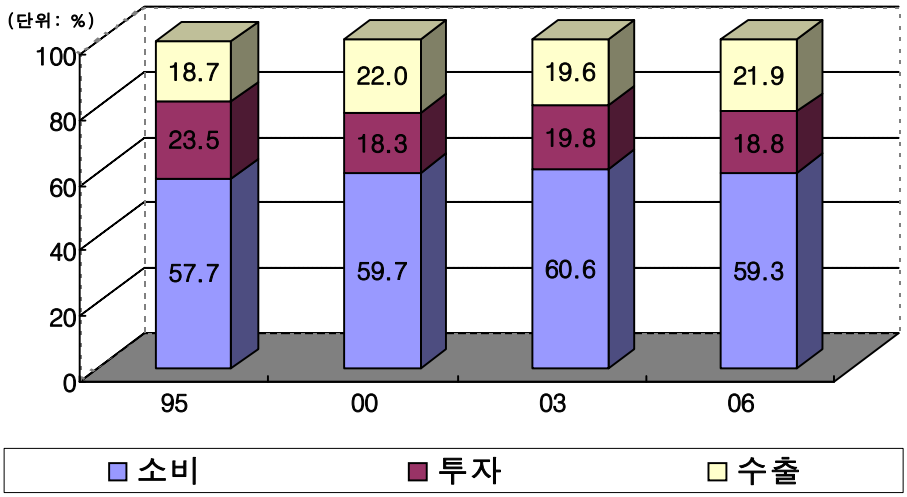
< 최종 수요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 >

	'90~'95	'95~'00	'00~'03	'03~'06
수출	13.0	17.4	11.3	14.0
소비	8.0	4.2	4.8	2.1
투자	12.0	2.8	5.7	2.9

자료: 국민계정, 한국은행.

- 소비와 투자 부문은 수출 부문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수출보다 크게 부진하여, 실제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수출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 2006년 전체 고용에서 소비와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의 비중은 2003년 대비 각각 1.3%p, 1.0%p 하락한 반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p 높아졌음

< 고용유발의 부문별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2006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추정 및 시사점에서 재인용.

3. 고용창출력 저하의 문제점

1) 구매력의 감소

○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로 가계 근로 소득 확충이 미흡해지고, 이는 구매력 약화로 이어짐

- 1995~2005년의 기간 동안 전체 일자리수는 151만개가 증가했고, 중기업과 소기업에서 각각 37만개 및 186만개가 증가[2]했으나,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72만개가 감소함

-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2~96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7.9%에 달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3.8% (특히 2003년 이후 2.7%)에 불과

- 이와 같은 근로 소득 확충 미흡으로 실질 가계지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8.0%에서 3.4% (2003년 이후 2.9%)로 하락함

- 여기에 간접적으로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 非경직성 가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06년에 3.1% (특히 2003~06년 2.0%)로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 유가 상승, 보험 및 연금 제도의 확대, 조세 증가 등의 원인으로 경직성 지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 2007년 가계 소득 상황 >

(단위: %)

	1992~96	1997~99	2000~06	2003~06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	7.9%	-3.5%	3.8%	2.7%
실질 가계지출 증가율	8.0%	-1.3%	3.4%	2.9%
실질 非경직성 가계지출 증가율	5.6%	-3.8%	3.1%	2.0%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中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 기준.
주 : 1) 실질 증가율은 각 항목의 명목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하여 도출함
2) 본 보고서에서 비경직성 가계지출은 가계지출에서 연료비, 교육비, 교통비,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지급 이자를 제외한 지출로 정의함.

2) 현대경제연구원,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경제주평, 2007.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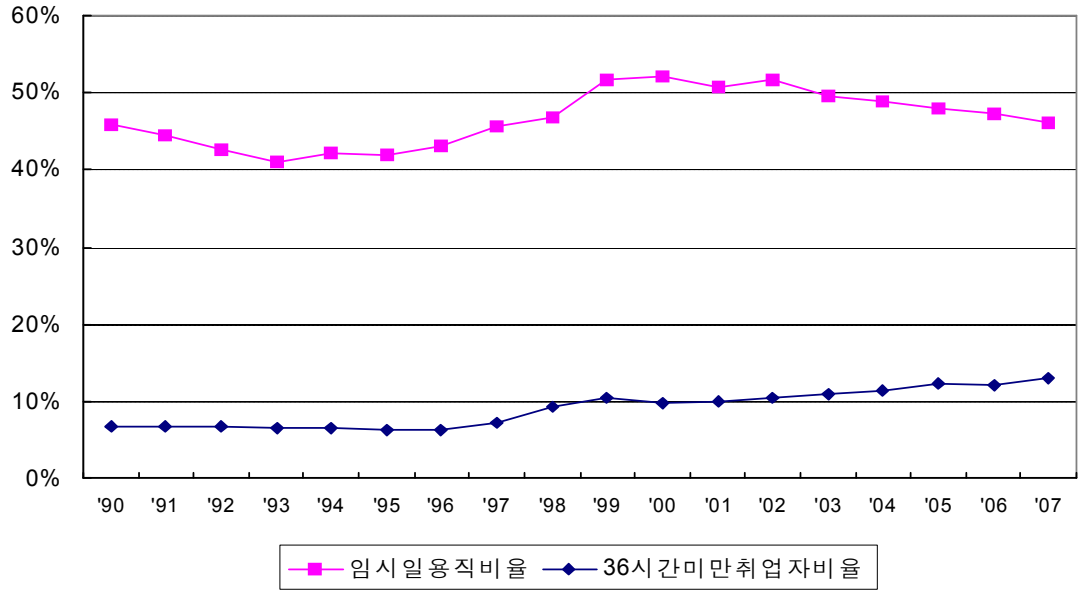
2) 불안정 고용의 증가

○ 임시일용직 및 단기간 근로자 비중이 증대하는 등 불안정 고용 상태의 인구가 증가하여, 질적인 고용 수준은 더욱 악화됨

-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증가하였음
  - ·90~96년 중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연평균 43.0%, 외환위기 이후인 01~07년 기간에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48.8%를 기록
  - ·외환위기의 회복과정에서 고용증가가 임시일용직 위주로 이루어져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무려 52.1%에 달하였으며, 그 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위기이전보다 높은 수준임

-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음
  -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90~96년 중 6.5%에서, 01~07년 기간에는 11.4%로 증가하였음

< 임시·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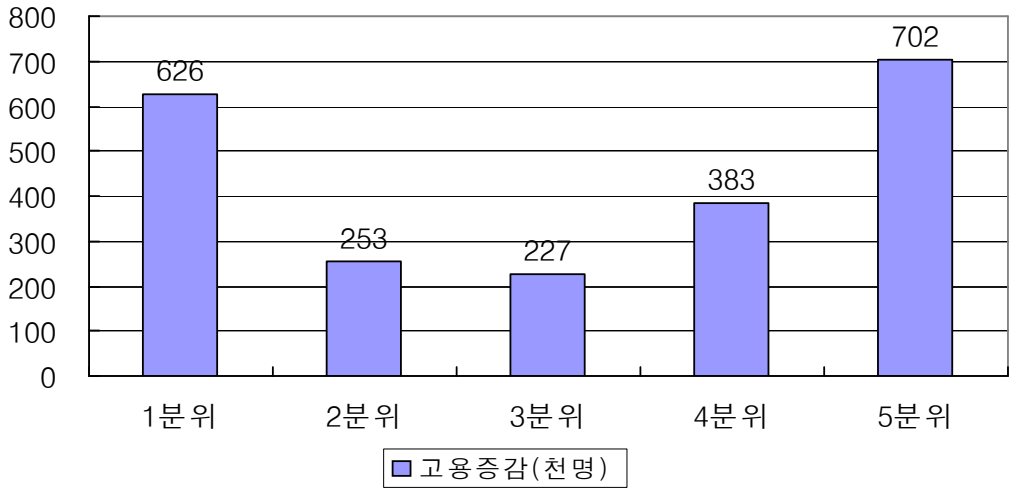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3) 중간 일자리의 감소

○ 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에 비하여 중간 일자리의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됨

- 전체 일자리를 직종 및 산업별로 구분하여 평균임금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때, 5분위(상위 20%)와 1분위(하위 20%)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중간 일자리에 해당하는 2, 3, 4분위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훨씬 낮았음
  -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1분위 일자리는 62만6천개, 5분위 일자리는 70만 2천개 증가하여 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반면 중간 일자리에 해당하는 3분위 일자리는 동기간 22만 7천개의 증가에 그쳤으며 2분위는 25만 3천개, 4분위는 38만 3천개의 증가에 머물렀음

<2001~2007년 일자리계층별 고용증감>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01, 07년, 통계청.

주: 1) 전체 일자리를 10개의 직종 분류 및 20개의 산업 대분류별로 총 20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2001년도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각 일자리 그룹의 순위를 매긴 다음 누적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1분위(하위 20%)~5분위(상위 20%)로 구분하였음. D. Acemoglu("Changes in unemployment and wage inequality: An Alternative theory and some evidence", NBER Working Paper, 1998), 전병유("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 13권 2호, 2007년) 등의 방법을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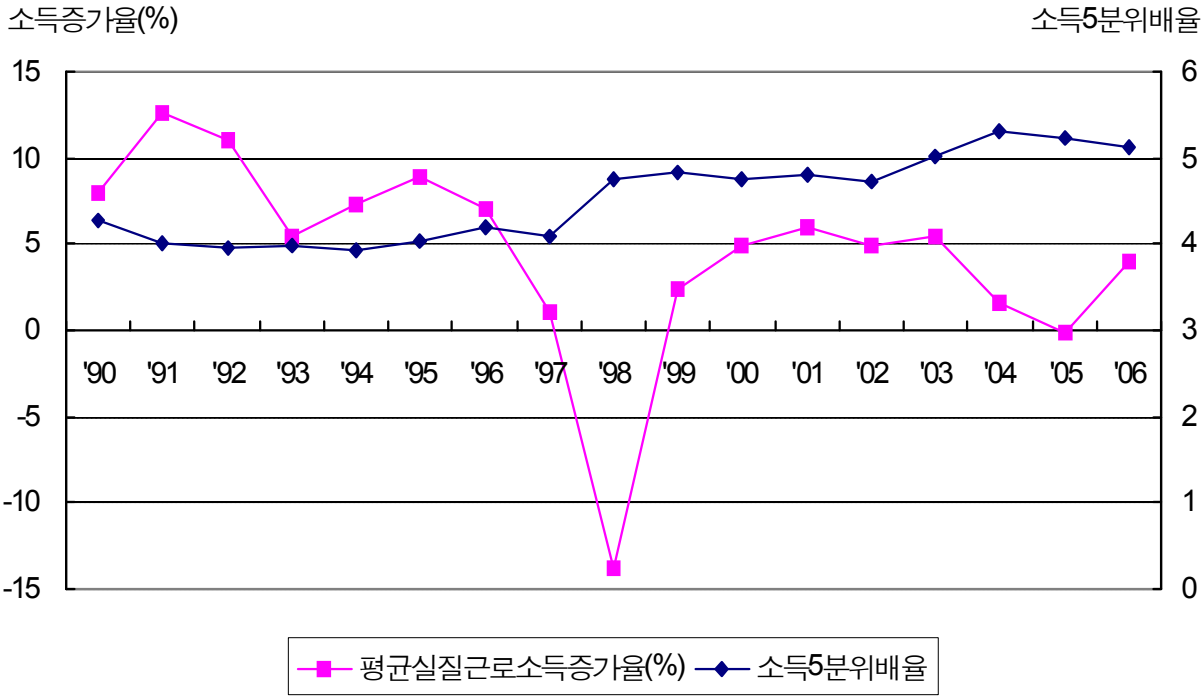
2) 2001년 기준으로 1분위~5분위에 속했던 일자리 그룹들의 2007년까지의 고용증가를 모두 합하여 위 그래프의 1분위~5분위 일자리의 고용증감치를 구하였음.

4) 소득 계층의 양극화

○ 일자리 창출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일자리의 질적 저하 및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계층간 근로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함

- 외환위기 이후 가계 근로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하위 소득계층의 가계근로소득의 증가세가 전체평균에 비하여 더욱 부진하여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나 1분위(최하위 계층)계층의 평균 근로소득은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음
  - 그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소득 5분위 평균근로소득/소득 1분위 평균근로소득)은 2001년 4.81배에서 2006년 5.12배로 벌어졌음

< 도시근로자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자료: 가계조사, 통계청.

4. 정책적 시사점

○ 가계 소비 여력의 확충을 통한 내수시장의 육성

- **경제의 국내 소비 비중 확대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은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시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므로, 국내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큰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제조업과 대기업 위주의 수출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내수 산업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증진 :**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제고하고, 이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계부채의 규모가 크고,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하여 경직적인 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가계에서 추가적인 소비 지출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경직적인 지출의 비중을 줄이고 각종 준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킨다면 소비 진작 및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 **기업 투자 활성화 :**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 회복을 촉진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함
  · 규제완화 및 세제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내는 것을 지원해야 함

- **외국인 투자 유치 :**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에서 직접 기업 활동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해야 함
  ·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됨
  ·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적 제약을 해소하여, 사회의 글로벌화를 진전시켜야 함

○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금융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을 육성해야 함
  - 여전히 서비스업에서 미숙련 직종의 비중이 높은 등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의 질적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서비스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혁신이 고용 창출력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필수적임

- **대학 교육의 부진 탈피** :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부진하여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05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대학교육의 경쟁력에서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4위를 차지
  - 대학 교육의 부진은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창출해낼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로 대학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업 교육 체계의 개편

- **직업 교육 체계의 개편 :** 직업 교육 체계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편해야 함
  - 탈산업화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의 중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중산층 감소 및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의 중위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를 만회해야 함
  - 따라서, 직업 교육 체계가 기존의 제조업 생산직 기술자 양성 위주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직업 교육의 내용이 실제 노동시장의 수요와 부합하여야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단순히 직업 교육을 늘리기만 하는 것은 고용 불일치를 심화시키기만 할 뿐임

【고 용】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신규 취업자 수 급감

○ 1월 취업자 수는 2,296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5천 명(1.0%) 증가에 머물러 지난 2005년 12월(20만 5천 명 증가)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자 수는 9.0% 감소한 77만 5천 명을 기록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전년동월대비 4.8%), 전기·운수·통신·금융업(0.9%) 등이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4.8%), 제조업(-0.7%) 등은 감소하였음

- 취업자 수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8만 4천 명(-2.1%), 1만 4천 명(-0.2%)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증가하여 청년실업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실업자 수는 77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7천 명(-9.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3%를 기록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경기	경제성장률	5.0	4.0(0.9)	4.9	4.0(0.9)	5.0(1.8)	5.2(1.3)	5.5(1.5)	-	-
경기 수요	소비재판매	4.7	4.5	6.6	7.1	5.3	8.6	5.5	2.6	-
경기 수요	설비투자추계	7.4	5.1	6.6	11.3	12.1	-1.9	5.0	7.4	-
경기 수요	건설수주	9.0	27.1	19.3	26.3	26.3	-5.6	29.6	1.4	-
경기 수요	수출	14.4	13.8	14.1	14.6	14.1	9.4	18.2	14.8	17.0
경기 공급	광공업생산	10.1	5.2	8.2	3.3	7.0	8.3	13.8	12.4	-
경기 공급	취업자수(만명)	2,315	2,330	2,343	2,284	2,370	2,361	2,358	2,326	**2,296**
경기 공급	실업률(%)	3.5	3.2	3.2	3.6	3.2	3.1	3.0	3.1	**3.3**
경기 공급	수입	18.4	13.0	15.3	13.4	14.7	7.3	25.9	23.2	31.5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54	61	60	-17	0.3	44	32	-8	-
대외거래	무역수지(억$)	161	75	146	24	50	45	27	-9	-34
물가	소비자물가	2.2	2.2	2.5	2.1	2.4	2.3	3.3	3.6	3.9
물가	생산자물가	2.3	2.0	2.7	1.8	2.5	2.0	4.3	5.1	5.9
물가	생산재물가	4.8	1.8	4.7	2.1	3.3	2.5	11.1	13.5	**17.3**
물가	최종재물가	0.5	0.4	1.1	0.3	1.1	0.6	2.5	3.2	**3.6**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의 약세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 **금리**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우려로 상승세를 보이다, 경기침체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하락세로 반전 전주말과 같은 수준에서 마감 (국채 10년물 : 3.77→ 3.77%)
- **환율** : 미 채권보증회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및 대형 사모펀드 자회사의 자금난 우려 등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감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 : 1.4684→1.4814, ¥/$:107.8→107.4)

○ (국내 금융 시장) 주가의 급등락

- **주가** : 주 초반 해외 증시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1,720.5p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고유가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신용위기 우려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 반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1,694.7→ 1,686.5)
- **금리** : 1월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3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02→5.15%)
- **환율** :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출회 등에도 불구하고 미 대형 사모펀드 자회사의 자금난 소식 등으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945.1→ 948.5)

○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금리의 상승 추세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3/4	4/4	1/4	2/4	3/4	4/4	2.15	2.22[1]
국내	거래소 주가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694.7	**1,686.5**
	국고채3년(%)	4.57	4.92	4.76	5.26	5.46	5.74	5.02	**5.15**
	원/달러	946.2	929.8	940.9	923.8	915.1	936.1	945.1	**948.5**
해외	DOW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348	**12,284**
	Nikkei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3,623	**13,688**
	미국채10년(%)	4.63	4.70	4.57	5.02	4.59	4.02	3.77	**3.77**
	일국채10년(%)	1.68	1.69	1.60	1.88	1.69	1.51	1.46	**1.49**
	달러/유로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4684	**1.4814**
	엔/달러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107.81	**107.40**
	두바이($/배럴)	57.33	56.71	63.12	66.42	76.64	89.06	90.44	**93.21**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2.21) 기준